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3. part1 제 93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3
2. 김경수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 , 국가균형발전 복원한다' 4
3. 민주 , 규제샌드박스 법안 발의 ... 여야 규제 입법 전쟁 시작 5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6
4. 특별법으로 스마트 규제 푼다 8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도 쪼개질까?...남경필 · 이재명 " 신중 "vs 양기대 · 전해철 " 분도 " 9
2. 6 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 분도론 '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10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충북도 "' 강호축 구축 ' 국가균형발전 이끌자 11

1. 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0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적기로 불리던 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회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협상 테이블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음
- 더욱이 정치권이 이달부터는 6·1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음
- 20대 전반기 국회가 사실상 오는 5월 종료되는 만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 뒤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여야는 2일 쟁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3월 임시국회 소집 검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이 시작됐지만 묵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서 3월 국회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이 논의될지는 미지수
 - 오는 5일 선거 D-100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논의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음
 - 선거를 앞두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법안 처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규제혁신법안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는 지적
- 민주당이 규제혁신법을 발표한 것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 애초 여권은 2월 국회 처리를 노렸지만 정부 여당 간 이견 조율 문제로 공전을 거듭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2. 김경수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 국가균형발전 복원한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김해뉴스

02

주요내용

■ 김 의원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혁신융복합단지·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내용 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균형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
 -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의 명칭이 참여정부 당시 사용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로 환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
- 개정안 내용
 -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
 - 시도별로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재정, 세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는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지역과 인근의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 지역이 주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뿐 아니라 균형발전 지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김경수 의원
 - 국토 면적의 12% 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 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
 -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에 의미가 있음

3. 민주, 규제샌드박스 법안 발의 ... 여야 규제 입법 전쟁 시작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0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자신문 Etnews

02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입법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 성장 달성을 위한 전제 법안으로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법안을 밀고 있는 야권과 입법 경쟁이 본격화
 - 법안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규제특례 부여방향과 추후 규제 준비를 의무화
 - 규제특례의 개념·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점검 관련 규정을 담음
-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보통신(ICT), 금융, 산업, 행정 부문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
- 신경민 의원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발의
 - 지난해 발의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
- 민병두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법을 대표 발의
- 홍익표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법안의 법안을 입법을 추진
-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의원이 대표로 다음주 경 발의할 예정
- 민주당은 5개 법안을 시급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처리에 속도를 냄
 - 당초 2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세부 작업이 늦어졌음
-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놓고 야권과 입법 경쟁에 들어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 있음
- 민주당 관계자
 - 샌드박스, 프리존 관련 법안 논의, 심사 과정에서 유사, 충돌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를 이뤄질 것
 - 여야가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데 뜻이 같지만 각론에서 보이는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8.03.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산업통상지원부

02

주요내용

■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위상 강화
-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 포괄지원협약제, 본격적인 추진 기반 마련

•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

-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수도권 인구비중 (%) : ('60) 20.8 → ('80) 35.5 → ('00) 46.3 → ('15) 49.5
- 수도권 GRDP 비중 (%) : ('85) 43.9 → ('95) 48.2 → ('05) 48.9 → ('15) 49.4
- 1000대 기업 (매출액 기준)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위치 ('16년, 부산상회)
-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 (비즈니스서비스업) 70%가 수도권에서 발생 ('00~'14, 산업연구원)

•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1일 발표)’의 이행을 위한 민관합치 (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
-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

-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
-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
-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위상·기능의 변화 >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	32인 (부처장관 13, 위촉위원 19)	⇒	34인 ※ 지자체 대표로서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 참여
기능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	⇒	• 예산 편성절차 참여 및 의견제시 • 주요 균형발전정책에 의결권 행사 •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02

주요내용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
- 아울러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새로 추진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정이 이루어짐
-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 5대 지원 패키지>

보조금	• 설비·입지보조금 보조율 우대 적용
세제	• 주요 혁신성장 거점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검토
금융지원	• R&D 사업화 자금의 저리융자 지원 •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신규펀드에 지방투자 의무비율 설정
규제특례	•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의 신속처리 지원 •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입지규제 개선
혁신프로젝트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대표산업 실증프로젝트 지원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법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 기반을 마련

-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됐기 때문
-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
 -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마련
 -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강조
- **산업부 백운규 장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
-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을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
-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 마련
-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작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4. 특별법으로 스마트 규제 푼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뉴스

02

주요내용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특별법'으로 관리해 규제프리존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
 - 이 용역에는 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
- 정부는 우선 일본 싱가포르 등 대표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을 들여다볼 예정
 - 일본은 국가전략특구 안에 규제샌드박스(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검토
- 현재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법 체계인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과 충돌 사항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
- 국토부 관계자
 - 이 밖에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연구할 계획
-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 특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입지 규제 특례와 국·공유지 활용 특례 등 지원 사항을 마련
 - 민간 부문 아이디어를 스마트시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제안·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이나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정책을 마련

1. 경기도 쪼개질까?...남경필 · 이재명 " 신중 "vs 양기대 · 전해철 " 분도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02

주요내용

■ 오는 6 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사이에 경기도 분도 (分道) 론이 재점화

• 경기 분도론

-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2 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하면서 처음 정치권에 등장
- 이후 선거철만 되면 분도론은 단골메뉴
- 분도론자들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 함께 경기도라는 하나의 거대 수도권에 묶이면서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분도가 최선이라는 주장

• 분도론에 불을 지핀 건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광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양기대 시장

- 지난 5 일 의정부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음
- 당선 후 경기북부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도지사 후보 거론자들과 함께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경기북도 신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토교통부가 수립중인 수도권 4 차 정비종합계획에 북부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하겠음
- 분도의 필요성을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조성, 지방자치 분권강화 등 크게 3 가지로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6 일 의정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
- 경기도의 정권교체, 그리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
-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도 분도 (分道) 를 이뤄내겠다고 공약
- 이중삼중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더 이상 소외와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을 것
- 그동안 분도와 특별도 설치가 지지부진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꼭 분도를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

• 하지만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남경필 경기지사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도론에 신중한 입장

• 남경필 경기지사

- 기회 있을 때마다 분도론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 최근 도의회에 출석해 분도 관련 질문을 받고 분도를 하면 당장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됨
- 실제로 북부지역의 세수는 경기도 전체의 20% 수준이지만 세출은 이보다 10% 가 많은 30% 에 달함
-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분도를 주장한다면 이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이해를 따진 것이라고 일축

• 이재명 시장

-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도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해 7 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기도가 취약한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도가 되면 결국 정부에 기대야 함
- 그런 상황이 주민에게 반드시 좋은 일인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분리

• 경기도교육청도 수원에 남부청사를,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두고 업무를 분장

2. 6 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앙일보

02

주요내용

■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이 재점화

-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시·군의회가 경기도 분도(分道)를 요구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들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찬성론자들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도를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음
- 경기도지사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분도론에 대한 도민의 선택이 주목

◇ 경기북부 시·군, '분도' 촉구...도지사 출마자 가세

- 14일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시·군의회는 수년 전부터 경기도 등에 분도를 요구
 - 경기북부는 북한과의 접경지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확산
 - 경기북부지역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면 지역발전 행재정 지원, 규제완화 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
 -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며 경기북도 신설의 여론을 모았음

• 의장협의회는 결의안

-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됐고, 여러 규제에 묶여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
-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도지사는 분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
-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이 분도 요구를 외면하자 포천시의회 등 일부 시·군의회는 지난해 중순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음

•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 등

- 이 지난해 5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도의회가 같은 해 10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분도 논의가 확산

• 올해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과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분도를 공약으로 내놓았음

◇ 경기도민 의견으로 분도 여부 정해야...북부 균형발전 시급

- 정치권의 분도 논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민 여론조사,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
-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분도론은 행정기관 등의 정책 추진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면서 제기
 -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경기남부 권력(경기도청, 정치권 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북부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음
 - 경기도청의 북부균형발전 시책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분도 논의에 앞서 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분도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
- 김환철 경민대학교 국제비서행정학과 교수
 - 경기북부는 산업 인프라 등이 부족해 주민의 불만이 내재화돼 있음
 - 행정기관, 정치권 등은 주민과 소통하며 북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 분도론이 나온 것은 20년도 넘었다며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반짝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함

1. 충북도 "' 강호축 구축 ' 국가균형발전 이끌자

0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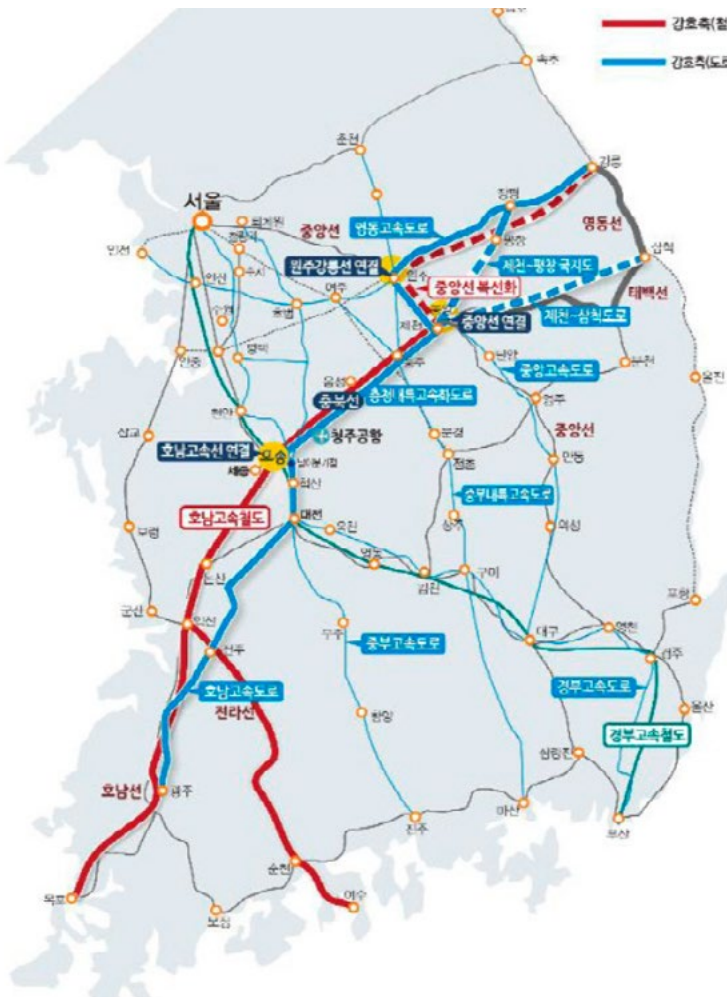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3.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대전일보

02

주요내용

■ 충북도가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강호축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 14일 도에 따르면 '강호축'은 충북을 중심으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개발축을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방안
 -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人'자형의 고속교통망을 전남-충북-강원을 잇는 'X'자형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강호축 개발의 핵심
- 강호축 개발논의는 지난 2월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
 - 이후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북선철도고속화가 강호축 SOC의 핵심사업으로 간주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예정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3공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에 지역 의견을 반영해 강호축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
- 강호축 개발은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충북을 비롯해 스마트 헬스케어·관광(강원), 유전자 의학(대전), 수소연료전지(충남), 농생명(전북), 에너지신산업·드론(광주·전남) 등 강호축에 걸친 시·도의 구상 실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는 충북외 7개 시·도가 강호축 개발에 공감하는 이유
- 도는 14일 개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에서 강호축이 국토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논리를 제안
 - 이 자리에서 강호축 소속 지자체 거점별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혁신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초광역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지식, 산업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강호축이 구축되면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강호축 SOC에 대한 선제적인 국가투자 유치와 호남충청지역의 북한지역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또한 1960년대 이후 고착화 된 영호남 양자대결 구도에 충청, 강원을 포함한 다자혼합 구도로 개편돼 국민대통합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는 분석
- 충청도 관계자
 - 국토개발계획에 강호축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호축 사업발굴을 위한 시도간 공동연구용역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에 행정을 시키겠다고 말함